

# 등록 재산에 가상자산 포함법안 통과... 국회의원도 등록

### 여야, 25일 처리 방침...민주 "P2E 입법로비 의혹 다음달 청문회"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거액 코인 투자 논란을 계기로 국회의원 보유 가상자산 신고·공개에 관한 입법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으로 불리는 국회의원 가상자산 투명한 법안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국회법 개정안 등이다.

여야 모두 해당 법안들의 신속 처리에 공감하는 터라, 이 법안들은 상임위원회를 빠르게 통과해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오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심사처

리고 24일 전체회의에 올릴 계획이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는 현금·주식·채권·금·보석류·골동품·회원권 등과 달리 코인 등 가상자산은 아예 재산 신고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개정안은 가상자산도 재산 신고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 골자다. 공직자 재산등록의 '사각지대'인 가상자산도 대상에 포함해 '제2의 김남국 논란'을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다.

21대 국회에서 이런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14건이나 발의됐지만 '김남국 논란' 이전에는 심사와 처리가 이뤄지지 않았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혁위)도 이날 오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는 국회의원 당선인의 재산에 가상자산도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현행법이 규정한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코인과 같은 가상자산도 포함해 관련 규정 활동에서 있을지 모를 이해충돌을 방지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또한 부칙으로 특례 조항을 뒤 현 국회의원들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 및 변동 내역을 6월 말까지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에 등록하도록 했다.

자진신고 형식이지만 21대 국회의원들에 대한 '가상자산 전수조사'가 사실상 법제화된 셈이다.

윤리심사자문위는 이를 바탕으로 이해충돌 여부를 검토한 의견을 오는 7월 31일까지 해당 의원과 소속 교섭단체 원내대표에게 제출해야 한다.

김남국 의원은 거액의 코인을 보유한 상황에서 가상자산 과세유예에 관한 공동 발의해 이해충돌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이런 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게 개정안의 취지다.

정개혁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속속결'로 통과시키고, 25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최종 처리할 방침이다.

공직자윤리법·국회법 개정안 외에도 공직자 보유 가상자산이 있는 법인·단체를 사적 이해관계자 대상으로 등록하고 가상자산 거래행위를 직무관련

자 신고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개정안도 발의된 상태다.

한편, 민주당 소속인 홍익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22일 김 의원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으로 불거진 'P2E'(Play to Earn·게임으로 돈 벌기) 업계의 입법 로비 의혹을 밝히기 위해 문제제기 차원의 청문회를 내달 실시하겠다고 재차 밝혔다.

홍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청문회를 6월 중 반드시 하겠다"면서 "여야 합의가 안 되면 표결을 통해서라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회의원은 '입법 로비' 청문회는 '김남국 사태 물타기'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청문회 추진 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손 잡은 여야?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왼쪽)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회추진협의회 결성 39주년 기념식에서 대화하며 손을 잡고 있다. /연합뉴스

## “대통령에 5·18 헌법 수록 전의하겠다”

### 박민식 국가보훈부장관 인사청문회...“기념사 누락, 입장 후퇴 아냐”

박민식 국가보훈부장관 후보자는 22일 5·18 광주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도록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의 관련 요청에 “확실하게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윤 대통령이 지난해 해에 이어 올해도 5·18 광주민주화운동 43주년 기념식에 참석했으나 헌법 전문 수록을 명확히 언급하지 않았다는 지적에는 “기념사에 빠진 것이 대통령의 5·18에 대한 입장이 후퇴했거나 그런 것은 (아니다). 워낙 확고한 입장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공언했으며 올해 기념식에서는 “오월의 정신은 자유민주주의 헌법정신 그 자체”라고 언급하며 5·18 정신 계승을 강조했다.

박 후보자는 이 전 대통령과 전두환 전 대통령 평가를 놓고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박 후보자는 ‘이승만 기념관 건립이 추진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을 받고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박 후보자는 기념관 건립 중기사업 계획을 세워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전두환 전 대통령 기념관도 필요하나’는 강성희 진보당 의원의 질문에 박 후보자는 “논할 가치가 없다”며 “전두환 전 대통령은 현행법상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받지 못하게 돼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강 의원이 “내란죄 수괴를 민주공화국에서 기념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지적하자 박 후보자는 “이승만 대통령을 내란목적살인죄 수괴로 생각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맞받기도 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 “한전공대 출연계획 재검토는 정치탄압”

### 민주 광주·전남 국회의원, 중단 촉구...“전기요금 인상 책임 전가”

민주당 소속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은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한국에너지공대에 대한 출연계획 재검토와 감사를 ‘정치탄압’으로 규정하고,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공동성명서를 통해 “감사원의 한국에너지공대 설립 적법성 감사에 이어 산업부의 한국에너지공대 출연계획 축소에 이르기까지 윤석열 정부의 치밀한 탄압이 이뤄지고 있다”며 “이는 한국 전력 적자와 전기요금 인상의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여론 호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한국전력의 한국에너지공대 출연금은 한국전력 연간 영업비용의 0.07% 수준에 불과하다”며 “문제의 본질인 적자 전기요금 체계는 방지하고 한국에너지공대만을 골라 정치적 희생양으로

삼는 것은 한전 적자구조를 더욱 고착화시킬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에너지공대는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급격하게 성장하는 글로벌 에너지산업 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에너지산업 백년대계’이자 국가균형발전 전략”이라며 “정치적 이유로 한국에너지공대에 대한 출연금을 축소하고 학교 투자를 막는 것은 미래 먹거리와 국가균형발전을 포기하는 자해행위”라고 지적했다.

지역 국회의원들은 “한국에너지공대 출연금 축소를 전면 철회하고 만약 산업부장관이 법률에 명시된 한국에너지공대에 대한 직무와 책임을 유기할 경우, 즉각 해임을 추진할 것”이라며 강력 경고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 이재명 “정부, 깜깜이 시찰로 日 오염수 투기 병풍 안 돼”

### “시료 검증 반드시 필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2일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시찰단 파견과 관련해 “시료 채취도 없고, 시찰단 명단도 없고, 언론 검증도 없는 ‘3무(無) 깜깜이’ 시찰로 일본의 오염수 투기에 병풍을 서줘서는 결코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오염수인지 처리수인지 핵폐기물인지 알 수 없지만 인체에 유해하고 일본의 오염수 방출이 적절하지 못한 부당한 행위임은 분명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국민 생명과 건강을 위해서 철저히 투명한 오염수 검증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그런데 윤석열 정권은 그럴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이 일본이 짜놓은 각본대로 움직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참으로 우려된다”며 “국민 건강에 조금이라도 위험성이 있다면 물다리를 백번이라도 두들겨야 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일본의 심기 경호를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켜내야 한다”며 “가장 피해가 클 인접 국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서, 또 대한민국 정부로서 당연히 반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박진 외교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한일정상회담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에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확실히 전달했다고 22일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한일 정상회담에서도 오염수 문제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께서 확실한 입장을 말씀해주셨다”며 “투명성 있게 국제 기준에 맞게 처리되는 게 바람직하며 그런 차원에서 일본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 건물·주택 리모델링, 신축, 지붕공사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건물 리모델링

  
칼라강판 지붕공사

  
주택 (외, 내부) 리모델링

  
전원주택신축

  
공장신축

  
징크판넬시공

  
창호(삿시)교체

  
농막

  
옥상스틸방수

## 명품매장가맹점모집

(구찌, 버버리, 프라다, 발렌티노 등 약 1,000여개 명품 브랜드 취급)

**모집지역**

- ▲ 광주(남구, 서구, 광산구)
- ▲ 전북(전주)
- ▲ 전남(여수, 목포, 순천)

**운영**

- ▲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 ▲ 온, 오프라인 판매 시스템
- ▲ 네이버 및 인터넷 플랫폼 입점 판매중
- ▲ 점주로 입점 가능(기본 급여)
- ▲ 현 본점 매점 성업중
- ▲ 명품샵 투자자 대 모집(수익율 : 년 15% 확정) (담보제공 및 물품제공)

**본점**

- ▲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용봉 전자 랜드 보짜 옆) 필 명품관

# 010-2288-0849 / 062-511-0849

**MD** **모던건설** 시공문의 전상하

사무실 광주광역시 북구 자미로45(신안동) 4층  
공장 광주광역시 서구 서향2길3(서향동)

T. 062)531-3530, H. 010-9229-3530